

국민의힘, 비대위 성격·임기 논란 속 당권 경쟁 조기 점화

내일 전국위서 비대위 절차 마무리 전대 개최 시기 놓고도 의견 팽팽 김기현·안철수 등 행보 빨라져 '자동 해임' 이준석 전면전 돌입

오는 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어 집권 초기 여당의 극심한 내홍이 정리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절차적 준비를 사실상 모두 마쳤으며, 오는 9일 전국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 및 비대위원장 임명 건을 의결하며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같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자동 해임' 위기에 내몰린 이준석 대표가 전면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하지만 비대위 인선, 전대 개최 시기 등 아직 남아 있는 숙제를 고려할 때 당분간 갑론을박이 계속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비대위가 조기 전당대회 준비에 초점을 둔 '관리형'이나, 아니면 당의 체질을 바꿀 '혁신형'이나 등 컨셉에서부터 이견이 분출되고 있다.

또한 비대위 출범 직후 즉각 전대 준비에 착수해 9~10월께 새 지도부를 뽑자는 조기 전대론, 정기국회와 새해 예산처리를 마무리한 다음 내년 초쯤 전대를 열자는 의견 등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전대 개최 시기는 당권 주자들의 선택에 따라 입장이 극명히 갈리는 문제다 보니 여권 내 차기

권력 구도와 맞물려 격론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알짜김치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김기현 의원 등 일부 당권 주자들은 조기 전대 개최를 주장한다. 집권 초반 부담스러운 비대위 체제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반면 잠재적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조기 전대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와 시기가 겹쳐선 안 된다는 것으로, 내년 4월까지인 원내대표 임기 등 정치적 시간표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의 성격과 임기, 전대 개최 시기 등은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와도 연결돼 있다.

앞서 권 대행은 비대위의 성격과 임기 등은 출범 후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비대위 출범을 앞둔 주말 공개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 막판 당내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최대 14명까지 들 수 있는 비대위에 친윤계가 얼마나 참여하게 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차기 당권 경쟁도 본격적으로 개막하면서 이미 '뽀퐁기'에 여념이 없는 당권 주자들의 행보도 더 빨라질 전망이다.

공부모임 '혁신 24 새로운 미래' (새미래)를 통해 세 물이에 나섰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후보이자 대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을 연일 저격하며 '체급 올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휴가차 미국에 머물러 온 안철수 의원도 귀국 후 전국위가 열리는 9일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한 4번째 토론회 모임을 개최하는 등 당권 레이스의 개막에 앞서 신발 끈을 조이고 있다.



추재진에 답변하는 서병수 상임전국위 의장 (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서병수(왼쪽 두번째)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이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를 마친 뒤 추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이준석 대표는 스스로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볼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물론, 당 안팎에서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인사들도 집단소송이나 토론회 등을 준비하며 전방위 여론전을 예고하고 있다. 비대위 출범을 위한 마지막 관문 격인 당 전국위원회를 이틀 앞두고 이 대표 측은 그야말로 '사생결단'의

각으로 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당 대표 복귀 가도는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명예회복을 기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당 관계자 및 이 대표 측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이 대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가처분 신청서 초안 마련에 착수했다.

비대위 의결의 효력 정지, 추후 비대위원장의 직

무 정지, 나아가 윤리위의 징계 결정까지도 가처분 신청 대상에 올려놓고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낸다면 실행에 옮기는 '디데이'는 전국위가 열리는 오는 9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다음달 정기국회 앞두고...갈등의 골 깊어지는 여야

국힘, 어민 복송 등 文정권 조준 민주, 김건희 여사 의혹 총공세

다음 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분을 수습하는 동시에 전임 정권의 각종 의혹을 고리로 야권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파상 공격을 펼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대통령 관저 공사 일부를 김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번 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국정조사 요구서의 경우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동의하면 제출할 수 있고,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위한 특위 계획서는 재적 과반 출석,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이 현재 국회 과반 의석수를 갖고 있는 만큼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단독으로도 국

조를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정조사 실시는 그간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실제 실시 여부는 대야 압박 및 협상 카드로 남겨놓을 전망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이권 개입 관련 의혹 등을 거론, 조속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공세도 본격화했다. 이 밖에도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와 탄핵 추진 등 모든 대응 수단을 열어놓고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가안보보안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탈북어민 복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전임 문재인 정권의 대북·안보 관련 의혹을 연일 파헤치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표적 수사 의혹 등도 공격의 소

제다.

유력한 민주당 당권 후보이자 대선주자인 이재명 의원과 관련해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법안카드 유용 의혹 관련 참고인 사망 등에 대한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여당이 집권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극심한 내분을 겪으며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야 공세에 당력을 집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오는 9일 비대위 출범을 통해 전열을 재정비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 때는 수적 열세 속에서도 야당에 밀리지 않는 화력을 선보이겠다는 방침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정당 운영방식 개혁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출범

평당원 시당위원장 출마 '관심' 20~60대 다양한 계층 참여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에서 민주당의 개혁을 바라는 정치개혁연대가 발기인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번엔 치러질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에 후보를 낼 예정이어서 평당원과 현역 의원 간 경선이 치러질지 관심이 쏠린다.

7일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에 따르면 전날인 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발기인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발기인으로 등록된 200여 명 가운데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발기인의 연령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으며 대학교수, 노동자, 농민, 지역 활동가 등으로 구성됐다.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호남 지역 유권자들은 대승적인 정치발전을 위해 민주당에 계속해서 일방적 지지를 보내왔음에도 이를 지역주의로 왜곡하고 입신양명의 발판으로만 악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과 시민사회의 비판을 무시하고, 당원을 배제해온 정당 운영방식을 개혁하기 위해 발기인들은 회원들을 모집하고 관리당원으로 참여시켜 정당의 개혁과 혁신을 불러와 전국적인 정치 발전에 기폭제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정치개혁 지향하는 정치신인 발굴·육성, 개혁적인 정치인들과의 연대, 광주·전남 정책발굴, 민주정치를 열망하는 국민과 정치개혁 세력 등과 함께 민주연합정부 수립 실천 등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혁연대는 먼저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에 평당원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발기인으로 참여한 2명이 위원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고, 추가로 희망자를 받아 최종 후보자를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오는 8~9일 광주시당 위원장 후보 등록을 공고한 뒤 11일 후보자를 접수할 계획이다.

민주당 사·도당위원장 선거는 통상 현역 의원을 단일 후보로 선출해왔으나 평당원이 후보로 나설 경우 실제 경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투자자 모심

1. 자금 - 10억원 이상
2. 기간 - 2년~3년 정도
3. 물건 - NPL, 금매물, 경매특수물건
4. 수익 - 연 20% 이상 법적 보장
5. 보장 - 근저당 또는 소유권 이전
6. 지역 - 경기, 수도권, 전남/광주
7. 방식 - 단독 또는 공동투자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
주식회사 오 천
H. 010-3605-5000

신안동, 대인동, 땅, 매매

1. 신안동 176평, 대인동 156평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월 300만원 정도 수입중
4. 매매 - 평당 1200만원씩, 조정가

문의. 010-3605-5000